

『농수산물 Total Utilization 프로젝트』 최종보고회 결과 보고

‘25. 12. 19(금). 농수산물팀

- 용역명 : 농수산물 Total Utilization 프로젝트
 - * ‘25. 5. 12. ~ 12. 17.(2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우병준), 36,300천원
- 과업내용 :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제 개정 소요 발굴, 부산물 활성화
를 위한 고부가가치 소재화 및 정책 방안 도출 등

□ 개 요

- 목적 : 연구용역 보고에 따른 최종 의견 수렴 등 자문회의(대면)
- 일시/장소 : ‘25. 12. 16(화), 14:00 ~ 16:20 / 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사무국장, 자문위원, 관계부처, 용역기관, 사무국 등 15명(붙임2)

□ 주요내용(보완 要) * 참석자별 주요발언(붙임1)

- 법·제도 ▶ 식품위생법·식약처 기준 등 타 법률 연계 보완
- 추진체계 ▶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구분한 추진 로드맵 필요
- 통계·근거 ▶ 부산물 발생량 경제적 가치 정량화 * 대표품목 또는 해외사례
- 시장·소비 ▶ 소비자 인식 개선 필요성 및 정책적 대응 논리 보강
- 거버넌스 ▶ 다부처 TF·협의체 운영 필요성 구체화

* 정책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 추가 반영 검토

□ 향후계획

- 농수산물분과위원회 보고안 및 본회의 의제 검토(‘25.12.~)
- 연구용역 완료계 접수 등 용역비용 지급(‘25.12.)

붙임 1 참석자 주요발언

구 분	주요내용
이재식 사무국장	농수산물 Total Utilization 논의의 핵심은 규제 개선임을 전제로, 연구진 제안은 사무국과 사전 조율된 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음. 특히 환경부 소관 규제에 대한 관계부처의 공식 입장과 판단을 먼저 청취한 후, 향후 정부 지원 정책을 단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함.
김진수 위원	수산물 부산물이 바이오소재로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용어·제도·통계·인프라 미비로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함. 특히 소비자 인식 개선, 식약처 원료 기준 정비, 냉동·전처리 등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함.
정서진 위원	소비자 인식과 시장 수요에 달려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발언함. 유럽 사례처럼 국가 차원의 반복적 인식 개선과 홍보가 병행되어야 법·제도 개선도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함.
이상건 위원	본 연구가 제한된 기간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농산·수산·식품 부산물을 포괄한 최초의 종합 연구로서 성과가 크다고 평가함. 특히 순환경제사회법을 중심으로 한 규제 개선 방향과 단계별 제도 개선 절차 제시는 정책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고 언급함. 다만 식품위생법 등 타 법률과의 연계 검토가 추가로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산업 육성 과제는 단·중·장기로 구분해 제시할 것을 제안함.
이상훈 위원	수산물 부산물의 식품 원료 활용은 한시적 식품 기준 등 제도 한계로 실질적 이용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함. 원료로 등재되더라도 1인 섭취량 제한 등으로 시장 활용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함.
홍준석 위원	부산물 활용의 경제적 가치를 산업연관분석 등 계량적 방법으로 제시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일부 자료를 활용한 파급효과 분석은 가능하나 본 연구 범위상 향후 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함.
민명준 위원	푸드 업사이클링은 시장과 인센티브가 부족해 스타트업 단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부산물 통계 구축과 범정부 TF 기반의 종합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발언함.
박천복 사무관 (농림축산식품부)	업사이클링 확산의 제약 요인으로 소비자 인식 부족, 원료 조달 애로, 규제 문제를 언급하고, 나주 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지자체·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역 기반 업사이클링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힘.
정중호 사무관 (기후환경청)	농수산물 부산물은 환경적 위해성 관리 관점에서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으며, 순환자원 인정·지정 제도를 통해 단계적으로 폐기물 제의를 확대 중이라고 설명함. 또한 인허가 애로의 근본 원인은 민원과 시설 문제로, 단순 법적 제외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언급함.
양호섭 팀장	농수산물 부산물 활용은 부처별 소관이 복잡적으로 얽혀 있어 단일 부처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며, 다부처 TF 운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특히 규제 개선과 산업 활성화를 병행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통한 조정·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우병준 박사 (용역기관)	농수산물 부산물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해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 제한을 제도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을 강조함. 특히 부산물·폐기물·자원의 경계가 불명확한 현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규제샌드박스과 연계한 단계적 제도 개선을 제안함.

붙임 2

참석자 현황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사무국	이재식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장	
자문(6)	김진수	· 경상대 해양식품공학과 명예교수	
	정서진	·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상건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이상훈	· 한국식품연구원	
	홍준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선임연구원	
	민명준	· (주)리하베스트 대표	
정부(2)	박천복	·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사무관	
	정종호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	
용역기관(3)	우병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선임연구위원	
	황윤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선임연구위원	
	김경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원	
사무국(3)	양호섭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수산식품팀장	
	김진철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수산식품팀 사무관	
	한영수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수산식품팀 전문관	